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8. 4 통권 제40호

現代經濟研究院

統一經濟 4 1998 제40호

편집자의 글
남북한 쌍방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3

권두언
남북 문제와 인내·끈기·이경일.....4

특 집
대북 농업 지원 방안
남북한 농업 협력의 현주소와 전망·임을출.....8
농업 종자 지원 방안·이두순.....15
비료 지원 방안·김삼식.....20
영농 자재 지원 방안·방한오.....26

논 단
최근 남북한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김연철.....34
한반도의 긴장 구조 - 항구적 평화체제의 모색·윤덕민.....46

통일다리
변화하는 북한의 체육 정책·권경복.....59

북한경제
북한의 상업유통관리체계·황동언.....64

체제전환국연구
러시아 민영화의 전개와 평가·오삼교.....75

해외기고
김정일 공식 취임하다·Aidan Foster-Carter.....89

독자투고
북한 컴퓨터·정보 산업의 현황과 전망·이영종.....96

통 권 제40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8년 4월 13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웅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정균 홍순희
류재현 이태일
황동언
편집주간 이태성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838-065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남북한 쌍방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통일 부문 기본과제를 선정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남북 관계의 기본틀을 제시한 뒤,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우리 정부는 남북 이산 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1단계 실행 방안으로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의 방북 규제 철폐, 위탁 가공 설비 반출의 100만 달러 제한선 철폐, 현재 500만 달러인 투자 제한선의 대폭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간 접촉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비료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차관급남북당국자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질 것을 제의해왔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정식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한 관계의 정경 분리 원칙을 수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의 이같은 변화들은 남북한간 교류의 기본인 정부간 교류·기업 교류·인적 교류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정당성만 외쳤지, 실제로 거의 실시되지 못한 이산 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의 경제 불안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남북한 경제 협력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발표한 것도 우리 기업의 대북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훌륭한 조치들도 남북한간의 진정한 신뢰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한낱 물거품에 불과할 것이다. 남북한 상호간의 정치적 계산없는 한민족간의 조건없는 교류를 기대해보면서, 이 조치들이 남북한 관계의 기존 틀을 깨는 촉진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1998년 4월

편집자

남북 문제와 인내 · 끈기

이경일 / 「문화일보」 논설위원

남한에서 50 년만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남북한은 지난 3월 두 차례의 접촉을 가졌다. 첫번째 만남은 남·북·한·미·중국이 공동으로 참석하는 4者 회담을 통해 이뤄졌고, 두번째 만남은 북경에서 남북적십자사회담을 통해 성사되었다.

작년 12월 이후 두번째로 개최된 4者 회담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렇다할 성과없이 끝났다. 3월 16일 시작된 4者 회담 2차 본 회담은 회기를 하루 연장해 6 일간이나 계속됐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커녕 다음 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서로가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하지만, 이 말은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이견 때문에 논란만 벌였다는 외교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회담은 한국의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남북한 대표의 공식 대좌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관심을 끌었다. 북한 역시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한 지 몇개월 되지 않는 시점에서 남북한은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맞아 조금이나마 서로 신뢰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했다.

더구나 한국의 새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진취적 제의를 해놓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같은 상황 변화로 인해 남한측은 북한측의 호의적 반응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4者 회담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북한의 대남 자세 때문에 남북한간의 깊은 골만 다시 확인해주었을 뿐이다. 북한측은 이번에도 주한 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단골 메뉴'를 들고 나와 회담을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북한이 분과위 구성의 필요성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그것도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실천에 옮기자는 한국과 미국측의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은 이번 회담에서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

앞으로 4첵회담이 조금이나마 진전되려면 북한측의 경직되고 비현실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 주한 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카드를 이용해 4첵회담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북한의 의도는 이번 회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과 더욱 긴밀한 외교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북한측의 태도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 주도적 역할은 한국이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북경에서 3월 25~27일 열린 제5차 남북적십자사 대표회담에서 북한측은 한국측의 분배 투명성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새정부 들어 처음 가진 남북적십자사 대표 접촉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타결된 것은 남북 관계 개선 전망을 밝게해주는 징조로 풀이할 수 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4월 초부터 대한적십자사는 옥수수 기준 5만 톤(75억 원 상당)의 밀가루, 소금, 초콜릿 등을 남포 및 나진항으로 수송·지원하게 되며, 이들 물자의 분배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제적십자연맹(IFRC) 요원이 분배 현장을 입회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식량 분배의 투명성 확보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남북적십자사 접촉이 결

렬된 바 있고, 이번 회담에서도 처음에 북한측이 분배 투명성을 위한 외부의 감시 활동에 난색을 보여 난항이 예상되었던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南北赤 합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첫 남북간의 구체적 결실이라는 점에서 북경회담 타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검색된 남북 관계에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이같은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은 다음번 南北赤 접촉때 북한측이 그동안 완강하게 외면해오던 남북한 이산 가족 재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 때문이다. 물론, 북한측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남한적십자사측이 이산 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제의가 있을 것임을 알리면서 北赤측의 준비를 요청한 데 대해, 북한측은 뚜렷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적십자사회담이 끝난 직후 남한 정부는 예상대로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을 올려놓았다. 정부는 우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내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북한 관계 당국으로부터 신변 보장이나 무사 귀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초청장만 받아오면 북한 방문을 '조건없이' 승인해주겠다는 전향적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산 가

족 문제 해결을 위한 尋人의뢰서를 북한에 전달키로 하고, 남북 이산 가족들의 현황을 데이터 베이스화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산하에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한 남북 이산 가족들의 생사 확인·서신 교환·상봉을 위한 지원 및 교류·알선을 적극 추진키 위해 대한적십자사 중심의 이산가족민간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韓赤을 비롯해 1천만아산가족재회추진위, 이북도민회 등 국내 이산 가족 민간 단체 20여 개소가 참가하는 이산가족민간기구협의회는 이산 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상봉을 알선하는 것 말고도 이에 소요되는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협의회는 민간 분야의 남북 교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이산 가족 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정부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65세 이상 고령 이산 가족들의 북한 방문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제3국 가족 상봉 경비를 상당 부분 지원키로 한 것에 이어 나온 적극적 자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산 가족 문제에 지나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禁物이다.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풀릴 기미만 보여도 밤잠을 못 이루며 애태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산 가족들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상처만 더욱 자극할 수도 있다.

우리 나름대로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조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다가는 낭패를 볼지 모른다. 이 문제를 포함한 모든 남북 문제들에 관해 북한이 아무리 빗장을 견고히 걸고 있어도 인내와 끈기로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길밖에 없다.

金成勳 농림부 장관이 최근 “북한과의 농산물 계약 재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환영할 만하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표는 북한 당국이 최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양국간 영농 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해온 것에 고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북 농업 지원 계획도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일·중이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농업개발단(KADO)’을 구성, 북한의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해 24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남북한은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려는 슬기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은 물론 북한의 적극적 수용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統**